

JPI-Yonsei CARIF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결과보고서

▷ 회의개요

-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3:30 - 18:30
- 장 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헬리덱스홀
- 주 제: Building Peace in East Asia: How to Resolve the Security Crisis
- 프로그램

- 환 영 사: 김봉현 원장 (제주평화연구원)
- 개 회 사: 고상두 소장 (연세대학교 CARIFS)
- 기 조 연 설: 라종일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 제 1세션 <평화의 미래>

- 사회: 김재한 교수 (한림대)
- 발표: Scott GATES(스콧 게이츠) 교수 (PRIO, 오슬로 대학)
- 토론: 이성우 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김민정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성진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 제 2세션 <동아시아 국가의 평화정책>

- 사회: 손기웅 (한국 DMZ 연구 협회장)
- 발표: 1) 양운철 소장 (세종연구소 북한학센터)
2) PAN Zhongqi(판중치) 교수 (푸단대학)
3) YUASA Takeshi(유아사 다케시) 교수 (히로시마 평화연구원)
- 토론: 이승현 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연구원), 김지은 교수 (충남대학교), GUO Dingping(귀딩핑) 교수 (푸단대학)

▷ 주요 회의 내용

제 1세션 <지역 평화의 이론과 사례>

· 발표: “평화의 미래(The Future of Peace)”, Scott GATES 교수

-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평화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부족
- 분쟁의 유형은 식민지 전쟁, 국가 간 전쟁, 내전, 국제화된 내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함의가 나타남

1. 더 이상 식민지 전쟁은 없다.
2. 200년간 1,000단위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전이 없었는데 이는 지역평화 구축에 큰 함의가 있다.
3. 1970년대 이후로 내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4. 국제화된 내전들이 있지만, 더 이상 강대국들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입한다.

- 잠재적 갈등과 평화는 분쟁 개시의 상대적 가능성에 따라 구분된다. 분쟁의 개시를 줄이는 방법으로,

1. 경제성장 2. 소득 수준의 증가 3. 민주화와 정치적 포용 4. 정부의 탄압이 적어야 함 5. 국제평화유지군의 역할 (키프로스의 사례가 대표적)

- ‘스티븐 핑커’ 교수는 세계평화에 대한 향후 위협이 민족주의와 천년주의라고 보았는데 일부는 맞는 말임

1. 민족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국가가 무한한 자원과 인력을 분쟁과 갈등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평화 전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2. 천년주의는 지금은 대량으로 살상하지만, 살상해야 할 대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사상이다. 이슬람국가가 대표적이다.

- 끝으로 미래를 전망하자면, 한반도를 포함해 잠재적 갈등은 여러 곳에 상존하며 미-중 갈등도 여기에 포함됨. 물론 실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임. 2017년에 벌어진 갈등은 2018년에도 모두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제 2세션 <동아시아 국가의 평화정책>

발표1: "The Exchange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Equivalent or Not?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의 교환: 등가교환인가?)", 양운철 소장

-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가안보의 교환에 대해 발표하고자 함
- 경제 제재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가?
 1. 제재대상 국가의 국내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2. 협력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3. 거래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
 4. 선언적 의미로,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에게 징벌을 한다는 외교적 상징으로 사용
 5.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명분을 쌓기 위해

-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있을까?

북한의 수입과 수출은 거의 유사한 추세로 변화.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수입과 수출의 연동이 상당히 끊어짐. 이는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 북한이 경제총생산의 90% 이상을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재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는 경제제재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음. 제재가 장기화되고 강화되면서 수입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자조, 자립, 자력갱생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 북한은 제재로 인한 외화의 부족을 어떻게 상쇄하고 있는가?

1. 국경거래에서의 수입이다. 2. 탈북자들의 송금
3. 국가기관의 불법적 경제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 4. 값싼 노동력 수출

-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의 대북 경제제재는 생각보다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음

-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화.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전쟁일보 직전에서 평화 무드로 급변한 것인가?

1. 자신감이다.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였으니 병진노선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2. 두려움이다.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고, 트럼프의 참수 작전, 코피 작전 등의 군사 공격의 위협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3. 문재인 정부의 중재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리비아 모델이다.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한 이후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 점진적, 동시적 조치이다. 단계별로 핵무기 포기과 경제 보상 조치를 연동시켜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3. 포괄적 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다.

- 끝으로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고자 함.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 의견은 양분되어 있음.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음

1.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이 정상국가화 국가 개방, 경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EU에 비견되는 아시아연합도 가능할 것이다.

2.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경제제재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권 붕괴와 내란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더 크게는 아시아 전체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발표2: “China’s Approach to Regional Peace in East Asia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접근)”, PAN Zhongqi (판중치) 교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웃 정책은 주로 경제 개발, 국가 안보 그리고 인접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에 있어, 경성안보이익에 도움이 되는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성안보이익과 규범적인 야망은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상승하는 힘에 대한 외부적 우려와 중국의 영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이 주변국 정책의 다른 목표들 사이에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동반자관계와 맞춤형 지역 다자주의를 결합하는 접근방식을 개발함. 다자주의가 중국 이웃국가 외교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양자주의는 더 발전되고 선호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은 이웃 국가를 전체로서 간주하지 않으며, 중국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하위 이웃 국가들에 대해 맞춤형 다자주의로 실증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 건설’에 관여하는 것에 매우 조심하고 주저해 왔음. 중국은 경제외교, 문화외교, 보장외교에 대한 선호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주로 권력의 부드러운 이용에 의존해 왔으며, 외교와 경제적 강압은 때때로 행해졌음. 대체로 중국은 이웃 정책 도구상자에 있는 군사적 방법보다 경제적, 문화적 도구를 우선시함.
- 2010년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은 해였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권력 구성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옛 중화(中華)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관심도 없음.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계층적 질서를 재개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중국의 목적에 역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점점 세계화 되어가는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실패할 운명임. 비록 중국이 역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기를, 또한 자국의 이익과 우려가 이웃들에게 더 존중되기를 바라고, 확고한 태도로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동-남지나해에서와 같이 다양한 외부적 제약과 평화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한 중국 공언적 목표로 인해, 머지않아 중국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지역 강대국으로서 계속 행동할 것임. 결국,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계속 중화(中華)로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 유일한 강대국이 아님.

발표3: “Japan’s Role for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안보 역할)”, YUASA Takeshi (유아사 다케시) 교수

-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 환경의 과도기에 직면해 있음. 북한 핵문제의 변화도 주요 화제 중 하나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서, "냉전 구조"의 종식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가 될 수 있음.
- 동아시아의 냉전구조는 핵개발과 그 관리에 있어, 주요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과 2차 대전 종전의 결과로 나타난 영토 분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전자는, 세력균형을 다루고 있어, 지역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 최근 들어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비핵화 방법의 구축이 주요 화두임.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은 정체.
- 일본 정부는 최근 북방영토론(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최근 아베 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과 국경 분리의 해결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 상황은 상호간 착각일 수 있음. 일본 정부로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매우 어려워지고 일본 시민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임. 국내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함. 분쟁 기간 중 일본 영토의 핵심인 쿠나시리 에토로푸 하보마이 시코탄 등 4개 섬에 집착하는 일본의 특이성은 일본 측에 타협할 수 없는 조건. 그러나 1956년 양국 간 협상(예: 2018년 12월 10일 피터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성명)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러시아 측은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을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일본과 러시아가 이 섬들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양국 간 주권과 관

할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임.

-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전략이 정체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다가오는 새 총사령부 개요가 계획하는 대로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새로운 안보 분야에서의 정책을 강화할 것. 아베 총리는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의 법치주의, 자유 무역체제, 시장경제 등 일본의 대외정책 비전으로 인도-태평양 자유화를 발표함. 그러나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묘책(silver bullets)"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없음. 동아시아에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일본은 자국의 국가 안보와 관심을 병행할 것임.

<토론>

이성우 연구위원:

- 국가 간 전쟁보다 내전이 왜 더 빈발 하는가?
- 국내전과 국제화된 내전 비슷한 트렌드로 가는데 왜 어떤 내전은 국제화되지 않는가?
- 전쟁과 평화를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선으로 보는 관점은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과연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 트럼프는 비자유주의적 포퓰리스트라고 하지만 정작 실질적 개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의외로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북한과 비핵화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 남북한 핵협상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현재 한국정부는 보수, 진보와는 무관하게 최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 이전의 햇볕 정책도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제는 틀에서 벗어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사슴사냥 게임의 구도가 아닌, 협력 조정 게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 통일이나 정권 붕괴 유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이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세대 효과도 있다. 한국전쟁 경험이 있는 세대는 10%에 불과하고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도 신세대이다.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협력 조정 게임으로 바뀔 수 있는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cott GATES 교수:

- 내전이 왜 더 빈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아마도 신생국가의 탄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꿔 생각하면 식민지 전쟁이 일종의 내전이었을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한 옹호를 하는 사람은 드문데 좋은 코멘트를 해주어서 감사하다.

김민정 교수:

- 유럽과 달리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는 무력 충돌의 사망자 숫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지만 동아시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이나 제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 인근국가의 전쟁이 전염효과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북한 전쟁의 경험을 보았을 때 전쟁이 난다고 해도 중국, 일본에서 내전이 일어날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Scott GATES 교수:

- 과급, 전염은 내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처럼 국경을 가로지르는 문제가 많을 때 특히 빈발한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남미의 이념분쟁이다. 혁명이 주변국가로 전파되는 것이다.

김성진 교수:

- 자본주의와 민주화의 이중변환이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같은 논리가 내전에도 적용 가능하지 않은가?
- 60-70년대에는 약소국이 많았기 때문에 내전 증가의 요인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데이터지만 이후와는 다른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Scott GATES 교수:

- 김성진 박사께서 새로운 국가의 형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한다. 국제, 국내전쟁 모두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면 다른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특히 신생국가라면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진다. 소련 붕괴나 유고 붕괴 이후 전쟁 빈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적인 후퇴에 관해서는 물론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감소가 더 큰 요소라고 본다. 고도의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동시에 분배가 체계적으로 차별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평화가 확산되리라 생각한다.

GUO Dingping 교수:

- 라종일 교수는 문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말했는데 게이츠 교수 발표에서는 문화요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 국제체제의 변화가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향후 분쟁발생확률 증가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Scott GATES 교수:

- 문화는 보호주의, 개방주의와 연관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교류는 경제 교류와 비슷한 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

다고 본다.

김재한 교수:

- 발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 비자유주의적 포퓰리즘과 반민주적, 정치체제, 무역분쟁, 영토분쟁 등이 전쟁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를 동아시아에 적용하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cott GATES 교수:

- 경제발전 수준이 분쟁발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내전에는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 또한 비자유주의 등은 내전 발발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 판 교수가 말씀하신 내재적 상쇄에 대한 지적, 불일치에 대한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충분히 차별화하지 않은 것은 내 오류이며 논문 작성 과정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Highlights>

